

제2018-2호(통권 21권)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CONTENTS

권두언 ————— 05

빅데이터와 사회과학

신광영(한국사회학회 회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심포지움 ————— 07

사회과학과 데이터의 혁신

한 준(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특별기고 ————— 09

한국의 미래결정요인과 사회과학

박 진(국회미래연구원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 ————— 11

협의회와의 인연과 회장재임기의 회고

안병영(연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각학각색(各學各色) ————— 14

온라인 댓글 논란 어디로?

학회동정 ————— 20

협의회 행사 ————— 22

협의회 임원진 ————— 24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빅데이터와 사회과학



신 광 영

한국사회학회 회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근대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등장한 사회과학은 사회시스템의 진화 및 기술변화와 맞물려 큰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초기 사회이론가들은 단편적인 경험 자료나 사건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경험적인 분석보다는 오히려 철학적인 혹은 사변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경제, 정치와 사회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루소의 불평등론이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경험적인 분석에 기초하기 보다는 사변적인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8세기에 들어서 발달하기 시작한 근대 국민국가 체계는 사회과학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무엇보다도 국민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각종 통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성격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유럽의 국민국가들은 국가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 부국강병을 내세웠고, 이는 징병과 징세에 필요한 인구 통계와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통계를 의미하는 영어의 statistics의 어원은 국가(state)에 관한 정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전체 인구와 전체 경제활동에 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주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광범위한 조사라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10년 주기로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센서스를 통해서 통계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센서스 조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세기 말 확률이론의 발달과 맞물려 추론통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센서스와 같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서 전체(모집단)의 속성을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추론통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칼 피어슨(Karl Pearson), 로널드 피셔(Ronald Fisher)와 같은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추론통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통계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과 공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 컴퓨터의 발달로 전산능력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통계는 사회학, 경제학뿐만 아니라 미디어, 비즈니스와 마케팅, 정치와 금융 영역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 학문의 주요 영역이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달은 또 다른 통계 혁명을 낳고 있다. 표본이 아니라 모집단 전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또 분석되면서,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전의 표본 자료와 구분해서 '빅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통계청과 국세청과 같은 국가 기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고, 이들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표본조사에 의존했던 사회과학의 연구가 추론통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집단 전체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또한 표본조사와 행정자료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자료 구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행정 데이터 (registered data)’로 불리기도 한다. 출생과 사망, 교육, 고용, 소득, 주택, 건강, 의료 등 다양한 정보가 국가 기관에 등록이 되고, 이들 정보가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이 되면서, 빅 데이터의 하나로 행정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

21세기 사회과학은 빅 데이터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세기의 사회과학이 스몰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사회과학은 빅 데이터에 기반 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가히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빅 데이터의 활용으로 빅 데이터는 점차 현대 사회과학에서 필수불가결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행정 데이터가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1968년부터 행정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행정기관들이 중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국세청이 주도하는 행정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노동시장, 교육, 복지, 의료 등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15세 이상의 모든 스웨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 노동시장 장기 통합 데이터(LISA)와 같은 행정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현재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모두 행정데이터를 통합하여, 교육, 고용, 소득, 주거, 가족, 의료, 복지, 사업체 등에 관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 그중에서도 덴마크는 1981년부터 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센서스 자료를 구축하여, 더 이상 10년 주기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핀란드는 1990년에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였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1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센서스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도 2000년부터 센서스, 등록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 세금데이터, 사회보장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서베이 자료인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자료와 행정데이터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증거에 기반을 둔 (evidence-based) 사회정책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전산능력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빅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서베이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정책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행정데이터와 같은 빅 데이터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과학이 뒤늦게 출발하였지만, 빅 데이터 시대에는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혁명을 통해서 유럽과 북미의 사회과학을 능가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과 데이터의 혁신*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과학에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사회과학이 자신의 과학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론적 사유의 논리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하게는 경험적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론적 가설의 검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과학에서는 그동안 사회과학에서의 표준적 과학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많은 방법론적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 또한 객관적 원칙을 지킨 양적 관찰 자료와 보다 주관적 해석이 강조된 질적 인터뷰 및 관찰 자료를 비교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논의와 논쟁도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이 동의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회과학 데이터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연구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점점 복잡해지고 변화가 극심해지는 사회 현실에 대해 사회과학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연구 성과를 통해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는 사회과학자들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수동적으로 맞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에는 사회과학의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과 함께 사회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에서 데이터의 변화와 혁신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지닌다.

(1) 온라인을 포함한 비개입적, 자동적 데이터 생산

요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전에 사용하던 데이터에 비해 훨씬 큰 규모 즉, 일부 표본이 아닌 거의 전수에 가까운 사례를 포함한 데이터이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또한 이전과 확연하게 다르다. 과거에 자료의 수집은 주로 설문지를 활용해서 직접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연구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응답자의 협조를 통해 얻게 된다. 하지만 요즘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하는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기록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처럼 관찰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수집되는 자료를 보통 비개입적 자료라고 한다. 연구자의 혹은 연구 관련자의 개입이 일어나면 응답자는 대부분 그에 반응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 관찰은 어쩔 수 없는 편향을 갖는다. 따라서 개입에 따른 편향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의

* 2018년 11월 23일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에서 “사회과학과 데이터”라는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원고는 심포지움 내용의 일부를 간추린 것입니다.

장점이다. 또한 수많은 연구 보조원들을 투입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모을 수 있는 표준적 조사 자료와 달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수집하는 빅데이터는 보다 적은 자원과 노력을 들여 엄청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다. 예컨대 온라인이나 SNS에서의 소통의 기록은 로그 파일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된 로깅을 이용해서 수집된다. 또한 사람들의 이동이나 거래의 흔적을 수집하는 경우에도 기계가 기록한 디지털 정보가 그대로 고스란히 데이터로 축적된다. 이처럼 디지털 정보기술의 활용은 편리하게 엄청난 규모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과학에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피하는 것이다. 다수의 개인들의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기회는 기술적 가능성에 머물 뿐 사회적 현실성이 되지 못한다.

(2) 공공 데이터 활용 및 민간 데이터와의 결합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다. 통계의 영어 표현인 statistics가 국가를 의미하는 state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통계적 자료의 수집과 축적을 처음 시작한 것 역시 정부였다. 개인의 출생과 교육, 건강과 일, 사회보장 등 현대인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정부는 자료를 수집한다. 이러한 자료는 많은 경우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출생, 사망 등 인구적 사건이나 소득과 재산 등 세금 관련 사안들에 대해 개인들이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각종 신고서 양식을 통해 정부에 제출해온 것이다. 때로는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과 활동을 기록하거나, 일터에서 근로 경력을 포함한 인사 및 보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청에 신고하는 형태로 각종 기관들이 개인에 대한 기록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축적된 데이터는 제대로 활용된다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고 또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뿐 아니라 정부 자료가 공개될 시 어떻게 잘못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를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해 왔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서류로 보관되어 활용을 하려면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수고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정보처리기술의 발전 특히 암호화 및 정보보호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디지털 정부로의 변화를 거치면서 많은 자료들이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됨으로써 접근과 이용의 새로운 가능성도 생겼다. 그 결과 서구 특히 북구의 정부 및 미국 등에서는 정부의 공공자료를 학계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정부 3.0을 통해 시작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통계청과 행정부처의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포함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늘면서 사회과학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형태도 정형화된 데이터로부터 비정형적 데이터로 확장되었다. 그에 따라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방법들도 새로운 기법과 분석방법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데이터 양식과 수집과정에서의 혁신이 데이터 분석방법에서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향후 사회과학의 미래는 이러한 데이터의 혁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수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다른 분야들 특히 통계물리와 응용수학, 전산학 및 정보과학 등의 분야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로의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회과학의 정체성이 이러한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사회과학자들의 비상한 관심과 많은 관심, 토론과 연구를 통한 혁신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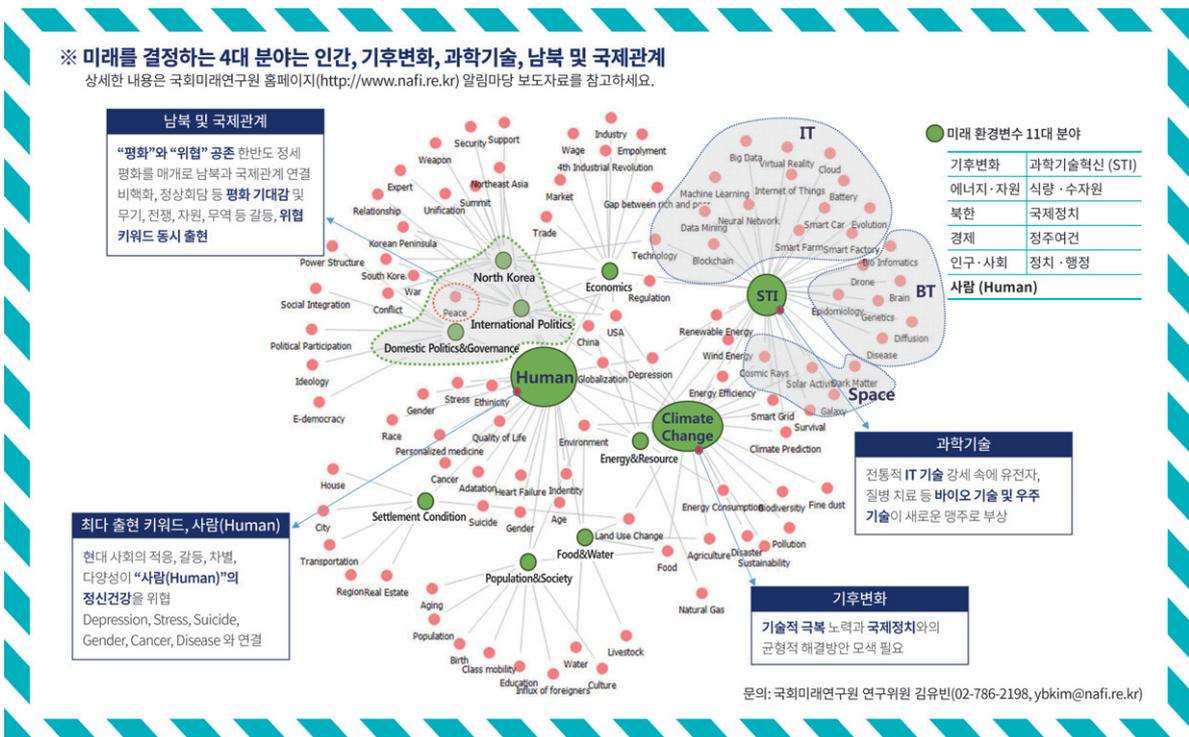
한국의 미래결정요인과 사회과학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난 10년 간의 주요문헌(SCOPUS DB)

및 1년간의 SNS(YouTube) 데이터를 대상으로 ‘미래’의 연관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전체 20만건이 넘는 키워드 중 미래 연관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① 사람(human)이었다. 'Human'은 우울증(depression), 자살, 스트레스, 질병, 치료 등 보건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와 연결되고 삶의 질, 젠더, 나이, 민족, 인종 등 사회 분야와도 연결되었다. 인간이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모든 분야의 연구대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였다.

다음으로는 ② 기후변화(climate change)였다. 기후변화는 환경, 에너지를 통해 Human과 연결되어 있고,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IT를 통해 과학기술과도 닿아 있었다. 아울러 미세먼지, 화석연료 등 키워드를 통해 인간(human)은 물론, 중국 등 국제관계 분야와 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자연과학 영역에 속하지만 인간, 국제관계 등 사회분야와 밀접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③ 과학기술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 세 개의 중요한 클러스터를 보였다: IT, BT, 우주가 그것이다. IT는 기후변화, BT는 Human과 긴밀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떠오르는(emerging) 이슈로 발견한 키워드는 우주(space)였다. '우주'는 흑점(solar activity), 우주방사선(cosmic ray)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이를 통해 다시 Human과 연결되고 있었다.

끝으로 ④ 북한 및 국제관계 관련 키워드가 늘어나고 있었다. 북한과 국제관계를 매개하는 키워드는 '평화'였다. 비핵화, 정상 회담 등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는 기후변화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접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위의 4대 부문 외에도 에너지·자원, 식량·수자원, 경제, 정주여건, 인구·사회, 정치·행정 등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번 빅데이터 작업이 사회과학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역시 미래의 화두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사회과학은 결국 인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둘째, 사회과학도는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인과지도로 그려본 결과 위의 4대 부문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가 사회과학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그 반대 방향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기후의 변화는 향후 더 가속화 될 것이며 사회과학은 이러한 변화가 인간과 사회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해질 것이다. 결국 미래의 사회과학자는 사회의 변화는 물론이요, 인간의 정신과 같은 인문학적 변화와 과학기술·기후변화 등 자연과학적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미래의 사회과학도에게 희소식을 말씀드리고 싶다. 부담은 커지나 그만큼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협의회와의 인연과 회장재임기의 회고*



안 병 영

연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1. 협의회와의 초창기 인연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창설된 지 어언 반세기에 가까워 오고 있다. 필자는 초대 회장이신 고병익 교수님의 두 번째 임기(1978-1980)때 편집위원으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제3대 박동서 회장(1980-1982)과 제4대 한배호 회장(1982-1984) 재임 기간에도 계속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제5대 홍승직 회장(1984-1986) 재임시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85년 9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 총회가 열렸는데, 그 때 홍승직 회장을 모시고 전병재(연세대 사회학) 교수와 필자가 함께 참여했다. 총회 주제가 'Social Science and Government'와 'Youth and Society: Viewpoints for the Future'였는데, 필자가 앞의 주제를, 그리고 전교수가 뒤 주제에 관해 발표했던 기억이다. 당시 북한 대표들도 참여하여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이후 필자는 제7대 황일청 회장(1988-1990)과 제8대 한상복 회장(1991-1992) 재임기간에는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제12대 협의회 회장직을 맡았다. 이렇듯 필자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의 인연은 비교적 협의회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문에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 적잖은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1976년 고병익, 박동서 교수 등 협의회 창설 주역들에 의해 "사회과학의 제 분야 사이에 상호협동을 기하여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및 교육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당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창설 제의가 직접적인 창설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돌이켜 보면, 협의회가 창설된 197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토착화, 방법론 등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던 시기였다. 이러한 역동적 시기에 창설주역이었던 제1세대 사회과학자들은 선구자적 열정과 헌신, 그리고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협의회에 기여했다. 그들은 한국사회와 한국 사회과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화두(話題)를 제시하고 다양한 담론의 마당을 마련했는가 하면, 한국사회를 보다 종합적, 본질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수의 학제적 연구를 기획, 조직, 수행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속적 협력과 지원, 협의회 주역들의 노력으로 1980년대 초 사직동 사회과학도서관에 협회 사무실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서강대 김덕중 교수의 꾸준한

* 2016-1호부터 협의회 초창기에 참여한 원로 회원들의 원고를 받아서 뉴스레터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들은 장차 본 협의회 역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 지원이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협의회는 창설 이래 기복이 있었으나 정치학회, 경제학회, 사회학회 등 주요 학회들을 아울러서 사회과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시기마다 다양한 사회과학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1985년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한국사회의 변화의 문제’ 심포지움과 1990년의 ‘한국사회인식: 실증주의 대 역사주의’ 심포지움이 필자의 기억에 오래 남아있다. 또한 ‘한국문화의 연속과 변화 연구’, ‘일제식민정책연구’, ‘경제발전과 사회계층변화연구’, ‘불평등과 형평에 관한 연구’ 등이 다년간 수행된 대표적 학제적 연구였다.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간하던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과 ‘사회과학논평’의 발간도 협의회 의 주요 사업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에서 두 차례의 회장국(1986-1987)과(1998-1999)을 역임하는 등 전체 아시아 사회과학계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회장재임기의 회고

필자는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협의회 의 제12대 회장직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돌이켜 보면 새 천년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였다. 이 시기동안 한국이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의 회장국이었으므로, 그 회장직도 함께 수행했다. 협의회 산하에 11개의 주요학회가 참가하고 있었다. 부회장에는 조형(이화여대)과 김정오(서울대), 총무에 정갑영(연세대), 연구위원장에는 임혁백(고려대), 편집위원장에는 임현진(서울대), 그리고 감사로 박상태(서강대)와 김문조(고려대) 교수 가 수고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실로 막강한 진용이었다.

1998년 5월 필자는 필리핀 마닐라 교외 Quezon City에서 열렸던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 집행위원회에 참석, 다음해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3차 총회의 주제선정 및 일정조정을 했다.

1998년-1999년간 협의회는 다수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석현호(성균관대 사회학)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3년간(1999-2001) 시행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연구였다. 1999년이 그 첫해였다.

1998년 11월 21일 협의회는 한국학술재단의 후원을 받아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열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경제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선진국과 제3세계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적용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학술 심포지움은 당시 세기 전환기에 국내에서 열렸던 신자유주의에 관한 학술대회 중 가장 알차고 깊이 있게 준비된 예가 아닐까 한다. 이 내용은 협의회에 의해 2000년 1월에 안병영, 임혁백 공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나남)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재판까지 했던 기억이다.

1999년 2월, 제24차 정기총회와 함께 열렸던 학술 심포지움 “새 밀레니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여기에서 김지하(시인), 정범모(한림대 교육학), 조혜정(연세대 사회학), 김문조(고려대 사회학), 정창영(연세대 경제학),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이 발표했다.

당시 협의회 의 가장 절실한 당면 과제는 협의회와 그 우산아래 11개 주요 사회과학 학회들 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일이었다. 그 취지아래 1999년 10월 1일, 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소속 11개 학회 회장단간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부진했던 양자 간의 활성화 방안과 각종 연구사업의 공동수행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2000년 2월에 개최될 협의회 의 정기총회 및 학술 심포지움을 각 학회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99년 8월에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 20 No 2가 발간되었고, 10월에는 ‘사회과학논평’과 새 책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출간했다.

필자가 회장으로 재임시 가장 큰 사업은 역시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SSREC)의 제13차 총회 및 학술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 협의회 의 회장단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사불란하게 준비했다. 마침내 1999년 10월 18일부터 21일 까지 연세대 상남기념관에서 아시아 13개국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 및 학술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대회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아시아와 아시아 사회과학의 내일에 대해 거시적, 학제적, 입체적 접근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학술 심포지움 주제는 ‘Reflections on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Past and Future’였고, 주제 이외에 특별 패널 토크으로 ‘Confronting Asian Values in the Perspective of Globalization’과 ‘Comparative Research on Poverty and Environment Linkages’가 다루어졌다. 여기서 13개국 대표들은 각기 자국의 경제발전, 환경 및 인구변화 및

세계화의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며, 저마다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을 극복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학술대회는 대단한 성황이었다. 특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권태준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은 내용이 좋고 통찰력이 뛰어나서 여러나라 대표들이 상찬을 아끼지 않았던 기억이 새롭다. 이 학술대회에 전에 협의회에 관계했던 원로교수들이 대거 참석해서 격려했고, 김덕중 교육부장관도 회의장을 찾아 각국 대표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협의회와의 오랜 인연을 확인했다.

2000년 2월 26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설계'와 '한국 사회과학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협의회 산하 11개 학회가 하나같이 적극적,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심포지움에 앞서 열렸던 제25차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필자는 2년간의 회장직을 내려놓았다.

3. 지난날을 돌아보며

돌이켜보면, 필자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의 약 40년간의 오랜 인연을 통해 실로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이에게 큰 신세를 졌다. 무엇보다 협의회를 통하여 한국사회과학계의 대표적인 제1세대 선배들을 두루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자 축복이었다. 필자는 협의회를 위한 그 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실로 많은 것을 배웠다. 아울러 필자는 협의회를 통하여 전공이 다른 수많은 학자들과 지적, 인간적 교류를 하면서 학문세계와 학자적 삶을 크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협의회에 관여하면서 필자의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크게 넓어지고, 또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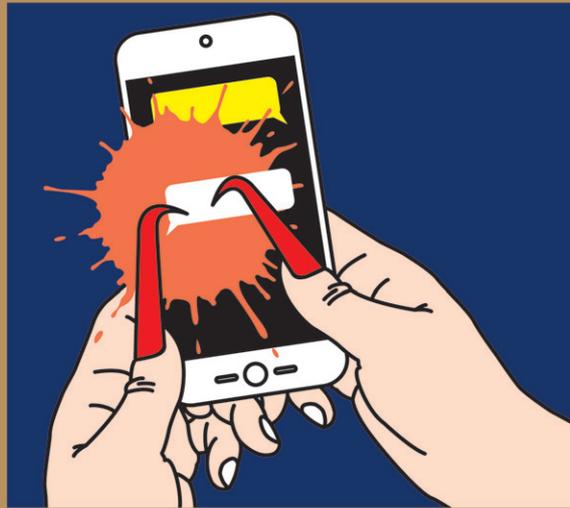
무엇보다 필자가 회장으로 재직시 임원으로 함께 일하며 도움을 주셨던 여러 교수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엄청나게 일이 많았던 그 2년 동안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필자가 대과없이 회장직을 마칠 수 없었을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벌써 20년이 흘렀다. 조만간 한번 모두 회동해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본 협의회는 금년 3월부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SSK-Networking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기사를 ‘각학각색(各學各色)’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기사 한 건을 여기에 전재합니다.

SPECIAL REPORT

본지·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 공동기획 '각학각색(各學各色)'

온라인 댓글 논란 어디로?



우리는 우울 안의 개구리일 때가 많다.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시각과 자세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와 공학자가 만나 인공안구를 만드는 시대다. 본지는 사회과학협의회(회장 박찬욱)·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SSK네트워크 지원사업단(한국연구재단후원)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일곱 번째 주제는 특검 수사로도 번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뜨거운 댓글 문제를 선정했다. 문화인류학·사회학·행정학·정치외교학·심리학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댓글 논란의 배경과 건전한 댓글 문화 형성의 조건 등을 진단·조언했다. 분야별 시각 차이를 흥미롭게 살펴보다 보면 자연히 융합의 눈을 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학제 간 협력을 위해 1976년 설립된 15개 사회과학 분야 학회의 연합체다. 안민정책포럼은 좌우통합을 위해 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1996년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 문화인류학

사이버보수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사이버공간의 상황적 보수성 악용해 댓글 조작...온라인 문화의 가능성과 한계 짚어야

김동주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인류학은 19세기에 부족사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학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인류 전체의 공통점과 여러 사회 집단이 가지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관계와 사회 집단의 형태, 사회 집단들 사이의 구별짓기와 불평 등, 그리고 타 문화와의 소통이 현대 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류학 연구도 새로운 소통의 기술과 공동체구성의 원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한다.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면, 최근에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개인들이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방식과 그것이 사용자에게 주는 의미를 에스노그래피(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으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기법)로 연구한다. 인터넷 인류학은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화가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사용자들이 특정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소통 습관을 비교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익명성을 이용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이를테면 이슬람권의 여성들처럼 오프라인에서 사회 활동이나 소통이 제한되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 사이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 주류 문화에서 소외된 소수자 집단의 경우에도 여러 계정을 이용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2010년에 시작된 '아랍의 봄'은 사이버공간과 소셜미디어가 가진 이런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방식의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은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양가적 욕망이 걸러지지 않고 표현되는 장이 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타인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익명성을 악용한 언어폭력이 일어나기도 쉬운 환경이다. 그렇다고 사용자들이 이 공간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문화일수록

일상의 행복한 장면이나 성공한 모습만을 공유하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감이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정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이 기존의 큰 흐름을 좇아 편승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사이버공간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상황적 보수성, 즉 사이버보수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보수성을 이용해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곧 댓글이 원래의 취지였던 양방향 소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조작을 위해 매크로 또는 봇(bot)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경우, 접속자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완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보안 기술은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권력이나 이윤을 위해서 댓글과 가짜뉴스를 양산해 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지난해에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8개국에서 문제가 됐다. 이 상황을 모른다면, 모든 댓글 뒤에는 당연히 제각각 다른 글쓰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댓글의 추세를 보고 자신의 시각이나 의견을 만들어나가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또 활자화된 형태의 댓글은 구어로 작성된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읽히고 매번 다른 해석이 가능한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글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내용은 더욱 강하게, 사실적인 내용은 더욱 설득력 있게 전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뒤늦게나마 온라인 문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찰하며,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배우는 '챙김'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일까. **E**



김동주 교수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에서 인류학을 담당하고 있으며, 카이스트신문사 주관을 역임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 · 역량 키워야

댓글 조작으로 온라인 정보 신뢰도 저하, 집단 극화 현상 우려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이런 환경이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면서 개인들의 일상은 좀 더 복잡다단(複雜多端)해졌다.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생활의 편의성이 증진됐을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은 과정을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 또한 엄청나게 증가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업무와 학습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인들의 생활과 생각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다양한 종류의 게시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어렵지 않게 서로의 생각과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연결된 개인 간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댓글 또한 온라인 환경이 가져다준 소통의 한 방식이다. 언론사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부터 누군가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댓글, 또 다른 이의 댓글에 대한 댓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유형은 다양하다. 내용에서도 게시물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의견을 주장하기도 한다. 표현 또한 정감어린 따뜻한 표현을 이모티콘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고, 거친 욕설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경우도 있는 등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게 존재한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이 지배적이다.

댓글의 역사는 온라인 공간의 시작만큼이나 오래됐다. 익숙한 서비스이지만 그로 인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악성 댓글'이 문제였다. 타인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나 욕설을 퍼부으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큰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특정 대상에 대해 혐오나 차별을 나타내는 표현도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연예인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자 법적·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라도 불리우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된 후 이제는 사라진 제도가 됐다.

지금도 댓글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댓글 관련 문제는 또 다른 성격이다. 직접적인 댓글의 내용

보다는 댓글에 대한 평가를 '조작' 해서 여론을 왜곡하게 된 문제가 급속히 부각됐다. 특히 여론의 왜곡은 민주주의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제도인 선거 과정에 개입해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댓글을 쓰는 개인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보다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는 것이었다. 누구나 가진 인정(認定)의 욕구와 함께 영향력의 욕구가 여기에 작용해 댓글을 쓰게 한다. 하지만 최근 조작된 댓글을 통해 목적하는 바는 이와는 다르다.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과 왜곡을 범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기능과 함께 정치학습을 위한 장(場)으로도 역할을 한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공의 정보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진위(眞僞)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내용만 수용하는 확증 편향의 문제는 댓글과 결합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나타내는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로 전개된다. 집단적 쓸림에 따라 갈라진 의견은 합리적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 소통할수록 갈등은 심화되고 상대에 대한 반감은 편향을 넘어 혐오로 나타난다.

해결을 위한 방안은 새로운 규범 속에서 모색해야 한다. 고답적인 윤리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자기 책임성에 기반한 행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종합적 판단능력을 키워야 한다. 상황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지는 법제도보다는 이런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역량의 증진만이 어렵지만 댓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근거가 될 것이다. **E**



배영 교수는...

한국정보사회학회 부회장, 서울시 여론조사 자문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 행정학

댓글 제한이 정부의 역할인가?

여론 조작은 댓글문화 이전에도 존재 ... 포털의 자율적 규제 강화, 시민의식 함양 필요
이향수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우 리 집 햄스터들에게도 호박씨를 먹여줘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초등학교 4학년생인 딸은 유튜브다. 햄스터의 성장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다. 오늘은 햄스터 간식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았더니 감사하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얼마 전에는 햄스터 목욕 영상을 올려놓았더니 “물 목욕도 가능해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햄스터는 모래목욕만 가능한 줄 알았던 딸은 물 목욕에 도전하겠다는 답신을 했다. 딸은 사이버세계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댓글은 열려있다.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이다. 인터넷 매체 이전 우리 사회의 미디어는 일방향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일방적으로 수용했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다. 물론 현실은 항상 규범적이지 않다. ‘두루킹 댓글 조작사건’ 처럼 말이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다. 맛집이라고 소개된 댓글을 보고 찾아가 식당에서 낭패를 경험한 이도 적지 않으리라. 댓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이나 왜곡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나 행정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행해진다면 그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혹자는 정부가 나서서 댓글을 아예 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털사가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서 가두리양식처럼 독자들을 특정 포털에 가두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정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이 최선일까?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단기적인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두루킹 사건’의 본질은 댓글 자체에 있지 않다. 정치판의 고질적인 여론조작 사건이다. 이는 인터넷이나 댓글이 없던 시절에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댓글을 규제하고 혹은 중국처럼 인터넷을 검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 조작에 대한 유혹이나 방법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은 자유와 개방, 공유가 기본 작동원리이자 철학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 혹은 사후적으로 개입해 개방의 공간인 인터넷 세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댓글조작 사건은 정부의 역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의식이 무엇 보다도 절실하다. 우선 민간 기업은 정부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자율적인 규제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 네이버와 같은 포털들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은 그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한지를 보여준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을 유지하되, 아웃링크에 대해서는 개별 언론사들과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포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언론사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져서’ 댓글에 대한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포털 내에 네티즌들을 오래 머물게 해서 창출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율규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시민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향유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 세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는 민주주의적 소양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이들이라는 전제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시민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시민교육을 위해 정부·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 역시 중요하다. **E**



이향수 교수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열린혁신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맡고 있다.

여론 조작 막을 정교한 규제 고민해야

정보의 폭포현상, 동조화현상에 조작 유혹 ... 위축효과 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필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격변기를 맞이해 정치적으로 새로운 쟁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가 된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도 그중 하나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민주국가에서 인터넷 댓글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인터넷 댓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과연 인터넷 댓글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을 놓고 보면 정치권은 댓글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오프라인에서 활동해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여론을 형성해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정치권의 인식은 다음과 두 가지 이론적 근거를 통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정보의 폭포현상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 먼저 정해졌는가에 따라 그 이후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그 사안에 대해 정보가 없어 특별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그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형편없는 노래라도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했다는 정보를 주면 그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 듣고 좋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원리다. 이와 같은 정보의 폭포현상을 고려할 때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을 선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선점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동조화현상이다.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다수의 의견이 주류적 인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고한 논리나 확신이 없을 경우 다수의 주류 의견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인터넷 댓글을 통해 단기간에 여론을 선점해 다수의 주류적 의견을

형성한다면 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더욱 좁혀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정치권은 변화된 정치환경 속에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보의 선점과 확산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게 된다. 인터넷 댓글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정보국 책임자로 활동한 선스타인(Cass R. Sunstein) 교수의 지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스타인 교수는 이런 상황을 방조하는 것보다는 위축효과를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하고 덜 효과적인 규제를 남발하기보다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똑똑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인터넷 댓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리고 현재 댓글 조작 방지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축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수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서 여론을 왜곡하고자 하는 빈대만을 박멸할 수 있는 규제를 현명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



조진만 교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정당학회보 편집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 심리학

부정적 정서 표현할 탈출구 만들어야

긍정적인 사건에는 신경 덜 쓰게 마련 ... 익명성 보장 문제도 다시 점검해야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최 근의 우리 시대를 인터넷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인터넷의 보급이 우리의 삶을 양적·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인터넷은 무엇보다 우리가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거나 제한됐던 자신의 표현을 거의 무한대로 가능하게 했다. 그러한 현상 중의 하나가 댓글이다. 댓글을 다는 것은 어떤 주제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는 욕구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한다. 특히 이런 욕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 댓글은 자신의 주장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해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좌절이나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고, 특정인을 언어적으로 공격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에 대한 감정입입이 부족해 다양한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만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욕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주지만, 욕을 하는 사람은 심리적 쾌감을 느낀다. 몇몇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욕은 카타르시스와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욕은 당사자에게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게 해줌으로써 만족감을 준다. 말하자면 욕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통해 유쾌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사건에 더 집중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적 사건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긍정적인 사건은 현재의 상태가 우호적이고 유리하다는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소홀히 해도 그것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은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상대방의 부정적 측면에 더 주목해서 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형성하기가 더 쉽다. 이것은 사건이나 사물, 인간에 대해서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판단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어떤 문제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서 해결 가능한 길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이나 비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건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방안을 선호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런 방안이 차단돼 좌절을 느끼거나 할 때, 사람들은 그에 따른 부정적 감정을 악성 댓글과 같은 음성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 쉽다.

또 인터넷의 익명성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을 더 용이하게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초래하는 해악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 보장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악의적 댓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익명성이 이런 행동을 촉진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



정태연 교수는...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장과 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회동정

경제사학회

<2018년 연말 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2월 8일(토), 14:00~18:30
- 장소 :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413호
- 주제 : “경제발전과 대외 경제 환경”

한국경제학회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2월 14일(목)~15일(금)
-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년 동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08:30~18:30
- 장소 : 서울대 행정대학원
- 주제 :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한국교육학회

<2019년 연차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6월 28일(금)~29일(토)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 주제 :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포용, 그리고 교육”

대한지리학회

<2018 지리학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24일(금, 토)
- 장소 : 경희대학교 SPACE21관
- 주제 : 한반도의 봄, 지리학의 도전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12월 01일(토)
- 장소 : 서울 국립외교원
- 주제 : 한반도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변환하고 있는가?

한국경영학회

<2018 한국경영학회 추계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기업가·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식>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15:15~19:15
- 장소 : 시청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 주제 : 경영과 여성적 가치의 실험: 좌절과 희망 사이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60주년 기념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6월 8일(금)~9일(토)
- 장소 : 서울대학교 글로벌 컨벤션 플라자
- 주제 : 한국을 넘어, 인류학을 넘어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27일(토)
- 장소 : 전북대학교
- 주제 : 복지와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의존담론의 재구성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2018정기사회학대회〉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8일(토)
- 장소 : 중앙대학교
- 주제 : 균열과 혐오의 사회를 넘어:
연대와 치유를 위한 사회학적 성찰

한국심리학회

〈2018 제 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8월 16일(목)~18일(토)
- 장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주제 :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말하다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2018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 장소 : 한양대학교 행당캠퍼스(서울) 사회과학대학/
공공정책대학원
- 주제 : 미래 미디어의 진화, 언론학의 좌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회 제34차 추계학술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 9:30~18:20
- 장소 : 한림대학교 Campus Life Center
- 주제 : 다시 젠더를 묻는다:
경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지평

한국정치학회

〈2018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8일(토)
- 장소 : 국립외교원

한국행정학회

〈2018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15일(토)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주제 : 한국 행정학의 성찰과 재도약:
공공가치와 정부의 역할

협의회 행사

01

협의회 회의

- 2018년 이사회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2:30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2018년 정기총회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7: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02

학술 활동

-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09:3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유은혜 의원실, 인문사회분야 주요단체,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후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2) 제4회 아시아미래포럼
일시 : 2018년 8월 25일(토) 14:00~19:30
장소 : The K 호텔 본관 3층 거문고홀
주최 : Atsumi International Foundation (일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주최
- 3) 심포지움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오후 14:00~20: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주제 : 사회과학과 데이터
- 4) 해외석학 초청강연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10:30~12:0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 (101동 303호)
연사 : Gary Gereff, Duke University
제목 : Global Value Chains and Development
주최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사회 : 임현진 명예교수
토론 : 황석만 창원대 교수

03

중앙 이코노미스트 “각학각색(各學各色)” 연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안민포럼, 중앙 이코노미스트 공동 기획

	주 제	계 재 일
1회	남북한은 하나인가?	3월 19일
2회	무역전쟁의 끝은 어디인가?	4월 2일
3회	한국 사회 뒤흔드는 미투 운동	4월 16일
4회	불발에 그친 6월 개헌 그 후	5월 14일
5회	지방선거, 당신의 선택은?	6월 4일
6회	논란의 대입제도 개편 어디로?	6월 11일
7회	온라인 댓글 논란 어디로?	6월 25일
8회	뜨거운 난민 논란 어디로?	8월 6일
9회	대한민국 페미니즘 어디까지 왔나	9월 10일
10회	백약이 무효? 저출산 해법은 어디에	10월 22일

협의회 임원진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한국정치학회 회장
부회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현)한국정치학회 회장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현)한국사회학회 회장
	이두희	고려대 경영학	(현)한국경영학회 회장
	이승호	건국대 지리학	(현)대한지리학회 회장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	(현)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감사	변종국	영남대 경영학	
	서현진	성신여대 사회교육학	

이사회 (성명 가나다순)

성명	소속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집행위원회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연 구	한 준	연세대 사회학	위원장
	김 석 호	서울대 사회학	
	김 옥 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박 정 수	서강대 경제학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서 은 국	연세대 심리학	
편 집	엄 석 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위원장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조 명 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최 성 주	경희대 행정학	
	하 병 천	서강대 경영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김 세 건	강원대 인류학	
	박 상 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박 은 실	추계예술대 예술경영	
	박 경 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이 승 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사 무 국	한 정 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치학	국장
	전 성 희		간사

운영협의위원회

학 회	성 명	소 속
경제사학회	김 재 호	전남대 경제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이 희 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정보경영학
대한지리학회	이 승 호	건국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이 두 희	고려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
한국교육학회	강 선 보	고려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김 석 우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한국문화인류학회	정 병 호	한양대 문화인류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최 원 규	전북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신 광 영	중앙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조 현 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
한국언론학회	이 재 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한국여성학회	신 경 아	한림대 사회학
한국정치학회	김 의 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한국행정학회	강 제 상	경희대 행정학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인 _ 박찬욱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18년 12월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03028, Korea

T.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이 뉴스레터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3923036)